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날짜 : 2026년 5월 27일(수) / • 문의 : 대책위 언론팀 박다솔(010-7236-3011) <총 17쪽>

[보도자료]

## 빛을 만드는 노동자

###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 고 김충현 노동자가 홀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충현 노동자는 원청인 한전KPS가 직접고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으로 잃고 나서 2025년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도 한전KPS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설치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회>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와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2026년 5월 31일이 다 되도록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다룰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전KPS정규직노조가 구성에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고 법원이 판결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전KPS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이면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주기가 됩니다. 김충현 대책위는 1주기 추모사업을 진행하며 1년이 다 되도록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며 1년이 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건희 한노보연 활동가

순서	발언자
추모목념	
발언1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발언2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발언3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발언4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유상 사무장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김충현의 염원이다. 직접고용 쟁취하고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김충현을 살려내라’고 외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28년 경력 베테랑 정비기술자였던 김충현 노동자는 안전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주기 추모제를 할 때 한전KPS 정규직 작업복을 입고 형이 못다 이룬 직접고용을 쟁취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합의서는 말 뿐이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와 명령, 원·하청 노동자의 혼재작업을 시켰다는 근거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법률가가 아닙니까?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합의서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한전KPS가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소지를 없앤다고 혼재근무를 시키지 않거나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한전KPS의 한 하청업체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이윤이 0원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노무비가 중간착취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고 한전KPS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을 선포합니다.

하청노동자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를 가슴에 묻으며 배웠습니다. 1주기가 추모대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직접고용을 이행하십시오. 발전소 중간착취를 금지하십시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김충현의 염원을 안고 투쟁할 것입니다.

김충현의 염원이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김충현의 염원이다.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김충현의 염원이다. 중간착취 금지하라!

2026년 5월 27일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 정부가 나서 위험의 외주화와 발전소 폐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 전 그날과 비교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가 바뀌긴 했습니다. 1년마다 쓰던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 4개월짜리 계약서로 쪼개졌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부 논의가 연장될 때마다 3개월, 4개월짜리 시한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전KPS 사측과 정규직 노조도 바뀌긴 했습니다. 그동안 신경도 쓰지 않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는가 하면, 임의로 비정규직 대표를 뽑아주겠다고 나섭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바뀌긴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약속하던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고, 고 김충현 대책위와의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력이 없어 임금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안전을 빼앗기는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고 김충현 대책위는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노숙농성투쟁과 대화와 양보 인내하면서 어렵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의 재발 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담은 이 합의서를 찢을 생각도,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 합의서를 찢는 행위는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것이며, 고 김충현 노동자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또다시 선거입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 직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선거 직전의 김충현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 [발언문]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1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을 때 김용균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김충현 노동자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을 했고, 고용노동부도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아직까지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용균, 김충현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측과 정규직 노조의 판지는 정부의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나서서 그 핑곗거리를 기다렸는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무엇 하나 뽀족히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있죠? 아까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하청으로 내몰려서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위협의 외주화는 끊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를 확인하니 조선 산업이 작년보다 더 많은 산재 사망 노동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을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당선되고 나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노사전협의체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대로 정부가 판단한 대로 불법 파견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화하면 됩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노동당은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고 안정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세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드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눈부신 빛의 이면에는 가장 캄캄하고 위험한 곳에서 홀로 죽어간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2일이면 빛을 만들던 한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 노조가 이견을 보인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 차일피일 노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삶을 임시 연장의 상태로 내팽개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죽음의 현장을 방치할 것입니까?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끔찍한 죽음의 외주화, 참혹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998년 파견법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늪으로 밀어 넣었던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보수 정당이 쉽사리 통과시키지 못했던 친자본 반노동 구조 개혁이라는 걸 덜 보수적인 정부가 도맡아 진행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로 준비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독일의 슈레더,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 신자본 계보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수많은 김충현들을 계속 하청의 사지로 몰아넣을 것입니까?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 자본만 탈탄소의 옷으로 바꿔 입고, 노동자들은 해고의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릴 것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바로 기후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정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5월 31일까지 한전 K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민주당 정부가 열어놓은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한전KPS 직접고용 투쟁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생명이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발언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삼성 노동자들의 떠들썩한 투쟁에 그늘에 가려져서 정작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김충현 동지의 고귀한 희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정부와 한전 KPS 자본은 내부 반발을 핑계로 협의체 출범조차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1년이 지나도록 현장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또다시 사지로 몰아놓고 환경 영향 평가까지 면제해 주는 무탄소 전환 무더기 악법을 야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때만 미친 듯이 서로 싸우고 이런 중요한 법안들은 야합으로 통과시키는 양당의 도진개썩 정치는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그리고 한전 KPS의 김충현. 우리는 언제까지 이 아까운 노동자들을 재물로 바쳐야 합니까? 어제 서대문 고가 작업 중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참혹한 죽음의 행진은 정권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협의체를 강제 출범시키십시오. 한전 KPS에 엄중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전달하십시오. 국회는 당장 이 악법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 싸움이 당장 노동자들 몇몇의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드는 가장 거룩한 발판입니다.

김충현 동지의 죽음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진보정당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 [발언문]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을 기록해 매달 발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이어오는 동안 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기지 않았다. 산업재해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발전소 화물 노동자들의 죽음을 찾게 되는 날도 있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소식을 들었던 날을 기억한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 활동가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탄식했다. 그의 죽음은 이렇게 기록되었다.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기계 작업 중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하청업체 노동자 A(50)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

김용균 사망 이후 8년, 김충현 사망 이후 1년이다. 우리는 변한 게 없는 발전소의 노동 환경과 노동 구조에 분노한다. 작년 7월 기준, 발전 공기업에서 5년 동안 51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사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85%에 달한다. ‘김용균 이후 바뀐 게 없다’, ‘반복되는 발전소 산재’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여전히 쏟아진다.

발전산업 분야에 민간을 끌어들이며 하청 구조를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2013년에 ‘선진화’를 하겠다며 발전정비 업무를 본격적으로 민간에 개방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은 정부가 만들었다.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짊어졌다.

한전KPS는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업무를 지시하여 일하게 했다.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한전KPS에 직접고용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한전KPS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늦추고 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잘못해놓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가 폐쇄되는 것을 감수하고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며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제시된 대안을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노동부, 기후부, 기재부 부처끼리 떠넘기고 있다. 왜 노동자들이 일일이 각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가. 부처 간 입장이 다르다면 이를 조율하여 약속을 이행할 방안을 가져오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회〉에서 약속한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기일은 5월 31일이다.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인 오늘, 약속한 날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를 위한 논의, 협의를 위한 협의 같은 말장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터를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 앞에서 정부는 비겁하게 굴지 말라. 이제는 이 용감한 노동자들이 제안한 정의로운 전환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정부는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정부는 지체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발언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유상 사무장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발전소 내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과 효율을 앞세운 다단계 하청 구조가 어떻게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 유가족의 피눈물과 우리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마침내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우리는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 그리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정 논의기구 구성 등을 엄숙히 합의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노동자들 앞에 더 이상 죽지 않고 해고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충현 동지가 하늘로 간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장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합의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약속은 공중 분해되고 있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법원조차 한전 KPS의 고용 형태가 명백한 사기이며 위법임을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법부조차 한전 KPS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한전 KPS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 위법을 시정하고 법원의 판결과 협의체 합의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전 KPS는 반성은커녕 시간 끌기용 향소로 일관하며 법치주의와 노동자의 생명을 내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불법과 직무유기의 배후는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정과 고용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확인되었고 합의서가 엄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전 KPS를 상대로 당장 합의를 이행하고 직접 고용을 단행하라고 명령하는 정부의 행정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는커녕 도리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한전 KPS와 뒤에서 지루한 협상 테이블을 벌이며 책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불법을 강제하지 않고 맺어진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공정한 정부입니까? 이는 한전 KPS의 불법 행위에 정부가 면죄부를 주려는 기만이며, 하청 노동자들을 또다시 위험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명백한 공범 행위입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인내심

은 바닥이 났고,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발전소 폐쇄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고용 안정을 논의할 기구조차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채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한전 KPS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꼼수 협상과 항소 뒤에 숨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의 협의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현장의 모든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꼼수 협상 중단하고 합의 사항 즉각 이행하라.

# [붙임자료1]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

## 원칙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이하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이후 변화된 환경(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한전KPS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 노동부 시정지시 등)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하여 직접고용 방안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1항

1. 한전KPS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한다.
2. 전환 대상 인원은 2025.6.2.(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일) 기준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협력업체와 체결 중인 계약에 따른 인원(설계서 상의 인원을 우선하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간접인력을 포함하되, 하청 본사 파견 인원은 제외한다.
4. 전환 시점에 한전KPS 정년퇴직 나이가 지난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되,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항

2025.6.2. 이전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위 가이드라인의 전환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한다. 2025.6.3. 이후 입사한 노동자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 제3항 (직제와 처우)

1. 기존 법원의 판결 및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전KPS에 동종, 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한다.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하여 노사전협의체에서 정하되,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
3.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제4항

1.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협의체를 각각 구성한다.
2.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한다. 단, 양 노사전협의체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3. 화력 분야는 2026.3.31.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한다. 직접고용은 2026.5.31.까지 완료한다.
4. 원자력 분야는 2026.4.30.까지 노사전협의체 협의를 완료한다. 직접고용은 2026.6.30.까지 완료한다. 단, 원자력 분야의 기존 계약기간이 2026.6.30.을 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직접고용을 완료한다.
5. 한전KPS는 직접고용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하도급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
6. 정부와 한전KPS는 노사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제5항

한전KPS는 소 취하 등 기존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제6항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의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제7항

정부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운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협의체 위원 8명으로 이행 점검 기구를 구성하여 직접고용 완료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 **[붙임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

### 원칙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등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일시적·일회성의 이슈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전·정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행·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항 (구성과 역할, 기간)

1. 정부(기후부 주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 영향을 받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협의하는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료환경설비 운전 하청노동자,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그리고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협의하는 분과를 둔다.
2. 협의체의 분과는 노·사·전·정, 즉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5사 및 자회사(사용자)’, ‘발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공기업 자회사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협의체 구성 전 사전 실무협의를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의 후속 이행 점검 기구가 담당한다.
3.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해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협의체는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석탄발전전환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른 신설위원회로 협의체의 구조와 의제 그리고 협의체가 논의해 온 결과를 이전한다. 따라서 협의체의 운영 기간은 해당 위원회 출범에 의한 협의체 이전 완료 시기로 한다.

#### 제2항 (의제)

협의체는 크게 아래 3가지의 고용안정 강화 종합방안을 의제로 한다.

1. 연료환경운전 하청 노동자와 경상정비 민간협력사 하청노동자, 발전공기업(발전5사)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2. 1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재배치, 근무패턴, 직무전환 교육 등 인력운영 계획과 자원 마련 방안
3. 고용안정 방안의 실제 범위를 결정짓는 관련 에너지 정책(석탄, LNG복합 등 화력발전소의 폐쇄 절차,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비중 확대 및 인력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정비산업의 공적 역량 육성 등)

## **[붙임자료 3]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노무비 지급·관리 개선 방안**

배경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2019.12.12.)으로, 경상정비 노동자(1차 협력사)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의 '발전산업 노무비 지급·관리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환경운전 분야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노무비 지급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 권고사항

- ① 발전사는 연료환경운전 분야 1차 협력업체 협의를 거쳐 노무비를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② 정부는 위 1항에서 발전사가 마련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한다.

##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추모주간 사업]

### o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추모 주간

- (기간) 5.27.(수) ~ 6.2.(화)

### o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5.27.(수) 11:0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혹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 o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 및 현장사진전

- (일시) 5.28.(목) 14:0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 (주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o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 (일시) 5.30.(토) 14:00

- (장소) 보신각(→청와대 행진. 2.3K)

- (주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추모주간 웹자보]

# 빛을 만드는 노동자

추모주간  
5.27.(수)  
~6.2.(화)

故 김충현 1주기



5.18.(월)~5.22.(금) / 인증샷참여캠페인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한전KPS직접고용 쟁취!  
발전소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함께 요구합니다

5.27.(수) 11:00 / 청와대분수대앞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5.28.(목) 14:00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 및 현장 사진전

5.30.(토) 14:00 / 종로 보신각 (청와대 행진)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6.2.(화) 11:00 / 남골당 참배

투쟁계좌

3333-16-3674435

카카오뱅크 박정훈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